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 -

2024. 1



금융위원회

순서

I. 2023년 업무추진 성과와 평가	1
II.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III. 핵심 추진과제	4
1. [민생금융]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
2. [공정시장]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습니다	6
3. [안전한금융]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7
4. [부동산리스크]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8
5.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
6. [시장안정]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
7. [성장지원] 금융이 기업과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11
8. [금융혁신] 책임있는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2
9. [미래대응]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14

I. 2023년 업무추진 성과와 평가

1 부동산 리스크, 기업 부실 등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 맞춤형 종합대응*으로 부동산PF 發 금융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고, 50조원+a 시장안정조치의 적극 운영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

* ①「PF 대주단협약」 가동, ②「PF 정상화펀드」 2.2조원 조성, ③PF 사업자보증 지원(25조원) 등

** 회사채 스프레드(AA-, 3년물, bp): ('22.12말)150.9 ('23.6말)81.1 (9말)77.4 (12말)74.4

- 가계부채 증가세를 양적·질적개선 노력으로 안정화*시키고, 시장중심 구조조정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며 신속한 기업 정상화를 지원

* GDP대비 가계부채(%): ('21)105.4 → ('22)104.5 → ('23.2Q)101.7 ('18년만에 처음 감소)

2 글로벌 경기둔화, 3高 현상 등에 맞서 실물·민생경제 적극 지원

-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자금공급으로 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벤처·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뒷받침

* ①초격차 등 중점분야 지원(91조원), ②벤처기업 지원(11조원), ③수출금융 지원(23조원) 등

-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中企·소상공인에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자금과 주거 안정을 지원

* ①中企 지원(84조원), ②특례보증자리론(42조원), ③임차인·전세피해자 보호, ④주택연금 확대 등

3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은행권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해외진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 위주의 낡은 규제 개선

* ①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②온라인 예금중개, ③예대금리차 공시, ④경영현황 보고서 도입 등

- 저소득·청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과 자립을 지원하고, 증가하고 있는 금융범죄·사기에는 범정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

* ①소액생계비 대출(11만명), ②청년도약계좌 출시(51만명), ③보이스피싱 피해액 30% 감소 등

Ⅱ.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①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민생 침해도 우려

-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경영 어려움 지속

* 가구당 평균이자 비용('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21) 209만원 → ('22) 247만원(+18.2%)

-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불법사금융, 불공정거래 등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금융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적극 대응 필요

*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접수건수(건) : ('22上) 5,037 → ('23上) 6,784 (+34.7%)

② 부동산 發 금융 리스크 등 금융시장에 위험 요인이 산재

- 실물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부동산 PF 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부문에 리스크 요인 산재
- 부동산 PF와 가계부채는 규모가 크고 금융부분과 연계성이 높아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

③ 실물 회복, 금융산업 발전 노력과 함께 미래 변화에 대응 필요

- 글로벌 산업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등에 맞서 실물경기의 조속한 회복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금융 공급 필요
 - 금융규제 혁신과 해외진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민 편의성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
- * 전체 서비스 수출 중 금융서비스 수출 비중 3% 내외 ↔ (OECD 평균) 12% (영국) 18%
-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 성장을 주도할 첨단산업 육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

2 업무 추진 방향

◆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 (1) 금융 부담은 낮추고 시장질서는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받고,
- (2) 금융리스크에는 철저히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며,
- (3) 실물과 금융의 동반성장과 함께 미래 변화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비전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

3대 핵심 목표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

9대 정책 과제

신뢰
금융

01 (민생금융)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02 (공정시장)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습니다.

03 (안전한금융)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튼튼
금융

04 (부동산리스크)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05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06 (시장안정)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역동
금융

07 (성장지원) 금융이 기업과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08 (금융혁신) 책임있는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09 (미래대응)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Ⅲ. 핵심 추진과제

①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1. [민생금융]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누적된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

- ① 은행권 자체적으로 2조원+a 규모의 이자환급*(1.6조) 및 취약층 지원(0.4조) 추진
*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 지급
- ② 제2금융권 금리 5~7%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이자 일부 지원(재정)
*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원칙적으로 5% 초과 이자납부액 1년치를 지원(차주당 최대 150만원)
- ③ 7% 이상 차주는 저금리대환대출(신보) 확대·지원(5%로 전환+보증료 면제)
- ④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 등의 채무부담 경감
* (現) 코로나19 직접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 (改) 코로나 요건 폐지하고 '20.4월~'23.11월중 사업 영위

□ 시장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 촉진 등 금리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

- 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 (기존) 신용대출('23.5.31.~) → (개선) 아파트 주택담보대출('24.1.9.~), 전세대출(1.31.~) 추가
- ② 금리공시 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
* 대출금리 구분공시(기준/가산/우대) 기준을 정비하여 은행간 비교가능성 제고 등

□ 서민·취약차주에 대해서는 금융접근성과 재기지원의 실효성 제고

- ① '24년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서민금융상품별 대출한도 증액조치*도 1년 연장 (~'24.12월)
* 근로자햇살론(1.5천만원 → 2천만원), 햇살론뱅크(2천만원 → 2.5천만원), 햇살론15(1.4천만원 → 2천만원)
- ② 서민금융상품부터 복합상담까지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종합 안내하여 이용자가 상품비교 후 대출실행까지 한 번에 이용 가능하며, 취업·복지·채무조정 등 복합상담 서비스도 비대면 제공

③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평잔 30%) 부여, 우수대부업자 유인체계 마련*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 지속
* 실적공시·제재감면·포상 등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우수대부업자 진입·유지요건 정비 등

④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차질없이 시행('24.10월)하여 연체 채무자의 이자* 및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사적채무조정** 활성화로 신속한 재기 지원
*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
**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금융회사는 10 영업일내 결과 통지

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의 일괄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이자율 감면 강화*
* (기존) 연체 30일 미만 및 신용평점 하위 20% 등 연체 우려자 → 이자율 30~50% 감면
→ (개선) 기존 특례 대상 中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 이자율 50~70% 감면

□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자산형성, 주거안정 등 생애주기별 금융수요에 부응하고 부담을 경감

① [청년층]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 강화*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확대
* 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
② 3년 유지후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 유지, 특별 중도해지사유에 혼인·출산 추가 등

② [주담대차주] 금리상승시 상환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다양한 민간 모기지상품 출시 및 탄력적 대출계약 활성화 유도
* 예 : ① 혼합형 대출 중 고정금리 적용기간(현재는 통상 5년) 확대
② 주기형 대출(일정주기로 금리변동, 그 기간내 고정금리 적용)의 고정금리 적용기간 확대
③ 금리상승시 은행과 월 상환금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대출계약 등

③ [고령층] ①주택연금 혜택을 강화하고 ②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
* ① 월지급액이 높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확대(예: 주택가격 2억원 → 2.5억원 이하)
② 실버타운 이주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 주택연금 지속 지급

□ 수수료, 보험료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담하는 금융비용도 경감

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취급에 따른 필수적 비용*만을 반영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감독규정 개정 등)하고 은행권 공시를 강화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② 자동차 보험료 및 실손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전반적인 보험료 부담을 경감

2. [공정시장]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습니다.

-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 ① 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 등 공매도 전산화 추진
 - ② 공매도 관련 대차(기관등)·대주(개인)의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 ③ 글로벌IB 공매도 조사(금감원), 제재수단 다양화·처벌 강화(최장 10년간 주식거래 제한 등)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일벌백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대응 강화
 - ①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 강화
 - ②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유인 근절
 - * ① 부당이득액 산정방법 법제화, 과징금 제재 신설로 부당이득 철저 환수
 - ②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
 - ③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쉰단계*에 걸쳐 관리·감독 강화
 - * 허위신고 처벌강화,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금지, 직권말소 사유 확대 등

- 자본시장 투명성, 거래소 경쟁력 강화로 일반투자자 권리 및 신뢰 제고
 - ①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
 - *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 부과, 만기 前 CB 취득시 공시의무 부과 등
 - ② 주주·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및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 * 예: ①일정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시 공시의무, ②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등 공시확대, ③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방안 심사 등
 - ** 상장사 주식을 25%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총 50%+1주 이상 매수의무 부과
 - ③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상장폐지 절차 단축, 파생상품 야간 시장 국내 운용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환경 조성
 - * 예: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제고계획 기재,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ETF 출시 등

- 내부 부정행위(횡령 등) 방지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기업 내부관리체계 개선
 - * 예: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직접 선정, 경영진의 외부감사인 선임 가능한 회사 범위축소

3. [안전한금융]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 방지

①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범정부 수사·단속 적극 지원
(~'24.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

② ①서민층 자금수요 대응, ②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③불법·과잉
추심 방지 및 피해구제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 지속

* ① 정책서민금융 적극 공급, ②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 주요 유통경로 단속·규율 강화,
③ 추심횟수 제한,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 요구 허용,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등

□ 신·변종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활용 민생약탈 범죄 방지

①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 활용 보이스피싱 등 방지*

* 통장협박 피해자의 이의제기 허용,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사기이용계좌 정보 공유

② 신종·민생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보고(STR : 금융회사 → 금융위 FIU)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예방 및 범죄 적발 지원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 증가 및 조직화·지능화에 대응

*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처벌,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지원 등

□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공정한 금융상품 이용 환경 조성

①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을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조직·인원을 법제화하여 역할과 책임확대

* (현행) 신탁만 적용 → (개선) 신탁 이외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에도 확대 적용

② 금융상품 온라인 광고·중개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전화권유 거부 시스템(두넛콜)의 실효성도 제고**

* 유튜브 등 활용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다크패턴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 마련 등

** 금융상품 전화권유 거부신청 외에 '신고기능'을 신설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 제고

③ 신탁·랩의 만기 미스매치 투자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 만기 미스매치 투자시 고객 사전동의 의무화,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등

④ 선불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예: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안전자산 운용의무)

②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4. [부동산리스크]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하여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 제고

①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

② 직접대출보증 외 리츠, 펀드 등 주금공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 추진

③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 확대

* (기존)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 → (확대) 공·경매를 통한 직접취득 허용

□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리 강화 및 손실흡수 능력 확충

①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추진*

* (저축은행·여전) 토지담보대출 총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
(농·수·신협, 산림조합) 부동산·건설업 대출 총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

② 특히,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 및 한도규제 등을 정비하여 내실있고 안정적인 부동산투자 유도

* ① 부동산 투자시 사업장별 단계 및 LTV에 따라 NCR 위험값 차등 적용(증권사·부동산신탁사)
②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및 내부통제기준 표준화(부동산신탁사)

□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 지속 가동

○ 아울러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a 규모로 운영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준비

5.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24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 * ①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
- ②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 구성

□ DSR 규제 내실화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받는 관행' 확립

① 소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24년 중)

- * 은행권 주담대(2.26일),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담대(6월^{짧혀}) → 연내 소금융권 모든대출 시행

②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범위 확대 등 추진

- * ① 기존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만기연장/자행대환) 종료(~'24.3월)
- ②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적용 등) 등

□ 차주의 상시적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① 주금공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확충

- * ① [발행측면] 커버드본드 발행 유도를 위해 주신보 출연료율, 예대율 등 개선
- ② [투자측면] 투자수요별 다양한 만기 유도, 시가평가테이블 마련 등

** 주금공 민간 장기모기지 지원 역할 강화

- ① 민간 커버드본드 발행금리 인하 지원(지급보증)
- ②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 어려운 은행에 헤지수단 제공(스왑뱅크)
- ③ 커버드본드 대규모 발행시 구조화 등 발행지원(커버드본드 재유동화)

②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 제공

- * ① 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 도입 : 혼합형 → 주기형·순수고정 등 중심
- ② 주신보 출연료율, 예보료율 등 혜택 부여

6. [시장안정]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위기시에도 금융시스템에 문제없도록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

①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②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 검토

* 해외사례(美·英 등)를 토대로 발동요건(예: 시스템리스크 우려) 등 제도화

③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보제도 개선

* ① 적정 예보료율 검토(현행 한도 0.5% 연장[24.8.31 일몰] 등)

②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26년말 예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 잠재 리스크에 대비하여 금융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 ① (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연체채권 상·매각 등 부실채권 선제적 관리 추진 등

②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제3자 매각 허용 등 연체채권 정리 제도개선

③ (여전사) 렌탈자산의 자산유동화 허용 등 중저신용 캐피탈사 자금조달수단 확대

④ (상호금융)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관련 취약조합 관리 강화 등

□ 시장간 연계성 확대에 대해서는 위기 전이 대응방안 마련

① 비은행금융중개(NBFI) 부문 규모 확대와 시장간 연계성 강화에 대응하여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 각 시장간 전이 경로 및 연계 정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 점검

② 퇴직연금의 부담금 분납(관계부처 협의) 및 편입상품 만기 다변화 등을 통해 연말 퇴직연금 자금이동 리스크 완화

□ 기업 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고 현안기업 구조조정에도 적시 대응

* '기업구조혁신펀드' '24년중 1조원 추가 조성, 워크아웃과 여타 제도(회생 등)간 연계 강화 등

□ 금융보안 규제를 ①원칙중심으로 개선하고 ②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

* ① 금융회사 스스로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행위규칙 축소 : 293→166개)

② 업무연속성 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강화, 재해복구센터 확대 등 추진

3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

7. [성장지원] 금융이 기업과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실물을 적극 뒷받침

① 산업부처·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된 총 21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 특히, 초격차분야, 新성장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집중 공급(102조원+α)

②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민간 합동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 ① 은행권 합동 중소기업 금리경감 프로그램, 中企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② 중견기업 보증한도 확대(100→300억원), 중견 전용 펀드·대출 도입, 중견기업 팩토링 등

□ 지역소멸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①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추진

* 재정(1,000억원 출자예산 반영), 산은, 지자체, 민간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3조원 규모 사업비 조달

② 산업은행이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은 부산이전을 차질없이 추진(산은법 개정 등)

□ 자본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벤처·혁신기업 성장 지원

* 상장을 통한 일반투자자(공모) 등 대규모 민간자금 조달로 유니콘기업 육성 가능

② 외부감사의 품질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필요한 회계전문인력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추진

* 흩어져 있는 개인사업자 명의 금융·상거래정보 등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사업자 매출·자산관리 등 업무 지원

8. [금융혁신] 책임있는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새로운 금융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여 금융산업별 발전방안 마련

- ① (금융지주)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공동영업 활성화, 핀테크 등에 대한 출자규제 완화 등
- ② (카드사) 고비용 카드거래 구조 개선, 카드산업 경쟁촉진 및 영업기반 확대 등
- ③ (상호금융) 대형 조합 건전성·내부통제 규율 강화, 상호금융권역 간 규제차이 해소 등
- ④ (온투업) 비교·추천 플랫폼 허용, 공공사업 개인투자한도 확대, 금융회사 연계투자 허용 등
- ⑤ (공모펀드) 판매보수체계 개편, 상장 공모펀드 도입, 핀테크업체의 비교·추천 허용 등
- ⑥ (신탁업) 담보권·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재산 범위에 포함 등

□ 금융서비스 고도화, 신규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혁신 지원

❶ **간편한 청구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차질없이 추진**(‘24.10.25일 병원부터 시행)

❷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 보험 청구 등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반려동물특화 보험회사 진입 허용**

* 보험상품 판매 창구를 보험회사 제휴 동물병원, 펫숍 등으로 다양화

❸ **시범사업중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정식 제도화 검토**

❹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및 단계적 확대***

* 자동차보험, 단기보험 우선 출시 →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등 순차적 출시

❺ **모바일 금융앱 간편모드*를 저축은행·신협·카드사까지 확대**

* [모바일 금융앱 간편모드] 고령층도 모바일 금융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앱화면 구성

❻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실효성과 이용접근성 제고**

* 횡수제한 폐지(現 연1회), 상한금액 확대(現 5천만원 → 예 : 1억원), 모바일 앱으로 신청 허용

□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기업 육성 및 제도적 기반 강화

❶ **핀테크-금융회사 간 협업 활성화*** 등 핀테크기업 성장기반 조성

* ❶2024 핀테크 위크(8월), ❷투자 네트워킹 데이(반기별), ❸협업모델 발굴 행사(분기별)

-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샌드박스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신청기업이 심사 진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도 강화

* 사전 검토 절차 없이 바로 신청하고, 신속히 심사 진행

- ③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통한 데이터 금융 활성화

* ① (오픈뱅킹) 제공대상 확대(개인→법인 추가), 오프라인 채널 도입 등 기능 확대
②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 확대(계좌 조회→휴면예금 해지 요청 등 추가), 이용가능한 정보 항목 확대(예: 전자상거래정보 등), 정보결합 허용 등

- ④ 전자금융거래시 본인확인 방법의 다양화·선진화* 추진

* 신기술 수용을 위해 열거식으로 제한된 접근매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 ⑤ 도입 후 10년이 지난 망분리 규제는 변화된 업무환경(클라우드, 오픈소스 이용 확대 등) 등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 마련

* 운영시스템 성격, 회사규모 및 보안수준, 취급정보 등에 따라 망분리 수준 차등화

□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외국계 애로해소 등 금융의 글로벌화 추진

- ① 해외진출 수요가 큰 아세안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금융협력협의회'의 역할·기능 강화 등을 통해 진출전략 고도화

* '한·아세안 금융포럼(가칭)' 정기 개최, 아세안 10개국의 특성을 반영한 진출전략 마련 등

- ②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영업애로 해소를 위한 정기적 의견수렴 (업권별 간담회 등) 및 인바운드 관련 규제 개선 추진

□ 금융산업 경쟁력의 토대인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 ①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세부과제 차질없이 이행

- ②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검토·마련

* CEO 승계절차, 성과보수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보안 방안 마련

9. [미래대응]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 딥테크(Deep-tech),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
 - ① 첨단산업의 설비·R&D투자, 공급망 국산화 등에 정책금융 집중 공급
 - ② 既조성된 혁신성장펀드 3조원에 더해 '24년중 3조원을 추가 조성하여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기업에 장기 모험자본 공급(5년간 15조원)
 - ③ 성장사다리펀드2*를 통해 민간참여가 어려운 딥테크 등 첨단분야 지원
* 기 투자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 형성(매년 1조원 조성 예정)
 - ④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더 많은 금융우대를 받도록 기술금융제도 개편

-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미래금융에 대비
 - ①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방향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춰 마련
 - ②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과 조각투자(음악저작권, 미술품 등)를 위한 신탁 수익증권의 제도화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 ③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 참여 은행의 예금토큰 업무를 샌드박스로 허용('24.3분기) → 테스트 수행('24.4분기)
 - ④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발행·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율 사항* 검토·마련
* 가상자산업 영업행위 규율, 유통량·발행량 등 기준 통일, 사업자 신고제도 강화 등

- 기후위기 심화, 인구감소 등 거시·구조적 변화에도 본격 대응
 - 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①친환경·저탄소 설비·공정 전환 지원, ②신재생 에너지 분야 모험자본 공급 및 ③ESG 공시제도 구체화 등 추진
 - ②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금융정책 대응방향 검토

주요 정책 과제	조치사항	담당부서
1. (민생금융)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 중소기업권 이자 캐시백 ▶ 저금리 대환보증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 대출금리 구분공시 기준 정비 ▶ 서민금융상품별 대출한도 증액조치 연장 ▶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목표 부여 ▶ 우수대부업자 유인체계 마련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 금융·통신채무의 일괄 채무조정 ▶ 기초수급자 트레이자율 감면 강화 ▶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 ▶ 주담대차주 맞춤형 금융지원 ▶ 주택연금 제도개선 ▶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자동차 및 실손 보험료 합리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 자금공급 집행 집행 새출발기금협약 개정 기시행 은행권 협의 자금공급 집행 플랫폼 운영 기시행 감독규정 개정 법 시행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시행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시행 일시납 신청·계좌개설 운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금융권 협의 등 주금공 내규 개정 등 감독규정 개정 기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과 중소금융과 산업금융과 기업구조개선과 중소금융과 은행과 서민금융과 서민금융과 은행과 가계금융과 서민금융과 서민금융과 청년정책과 거시금융팀 거시금융팀 가계금융과 보험과
2. (공정시장)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 ▶ 불공정거래 법령 안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 유사투자자문업자 세부 규율체계 마련 ▶ 전환사채 제도개선 ▶ 자사주 제도개선 ▶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마련 ▶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기업 내부관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조사·제재 등 자본시장법령 개정 방안 발표 방안 발표 자본시장법 개정 거래소 방안 마련 외부감사법령 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시장과 공정시장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공정시장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과 기업회계팀
3. (안전한금융)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사금융 척결 및 이용자 보호 ▶ 신·변종 보이스피싱 대응 ▶ 가상자산 활용 의심거래보고(STR) 활성화 ▶ 보험사기 증가 및 조직화에 대응 ▶ 상호금융권 소비자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신종민생범죄 유형화 및 공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금소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금융과 금융안전과 FIU 보험과 금융소비자정책과

주요 정책 과제	조치사항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보호 조직·임원 법제화 ▶ 공정한 금융상품 이용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 전화권유 거부 시스템(두낫콜) 확대 개편 ▶ 신탁랩 리스크 관리 강화 ▶ 선불업자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소법 개정 가이드라인 순차적 발표 개편방안 발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전금법 하위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정책과 금융소비자정책과 금융소비자정책과 자산운용과 금융데이터정책과
4. (부동산리스크)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F 대주단 협약」 운영 내실화 ▶ 주금공 PF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 ▶ 「PF 정상화펀드」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 확대 ▶ 제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 부동산 관련 NCR 및 한도규제 정비 ▶ 시장불안시 시장안정 조치 즉시 확대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F 운영 주금공법 개정 펀드운용사 계약 개정 감독규정 개정 등 (증권사)방안 마련 (부신사)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정책금융기관 내부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정책과 금융정책과 금융정책과 중소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시장분석과
5.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 DSR 규제 내실화 ▶ 가계부채 질적개선 위한 민간의 제도적 기반 확충 ▶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시범사업 시행 등 행정지도, 감독규정 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시금융팀 거시금융팀 거시금융팀 거시금융팀
6. (시장안정)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 특별정리제도 도입 검토 ▶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 ▶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대응방안 마련 ▶ 금융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 퇴직연금 머니무브 리스크 대응 ▶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추가조성 ▶ 워크아웃과 여타제도(회생 등)간 연계 강화 ▶ 금융보안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보법 개정 세부방안 검토 예보법 개정 연구용역 실시 시행/은행업감독규정개정 제도개선방안 마련 시행령 개정 감독규정 개정 지속 모니터링 정책금융기관 출자 TF 운영 개선방안 및 규정개정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개선정책과 구조개선정책과 구조개선정책과 구조개선정책과 은행과 중소금융과 중소금융과 중소금융과 자산운용과 기업구조개선과 기업구조개선과 금융안전과
7. (성장지원) 금융이 기업과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금융 공급 확대 ▶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추진 ▶ 산업은행 부산이전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감사·회계제도 선진화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공급 집행 관계기관 협의 등 펀드 결성·집행 산은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외부감사법령 개정 등 방안 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금융과 산업금융과 산업금융과 산업금융과 자산운용과 기업회계팀 금융데이터정책과

주요 정책 과제

조치사항

담당부서

8. (금융혁신) 책임있는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금융산업별 발전방안 마련	방안마련 및 발표	금융제도운영팀
금융지주	발전방안 마련	중소금융과
카드사	발전방안 마련	중소금융과
상호금융	온투법 시행령 개정 등	금융혁신과
온투업	자본시장법 개정	자산운용과
공모펀드	자본시장법 개정	자산운용과
신탁업	하위규정 개정 등	보험과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세칙 개정 등	보험과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검토	은행과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제도화 검토	출시 준비 중	보험과
▶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관계기관 협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모바일 금융앱 간편모드 확대	예보 내규 개정	구조개선정책과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편	네트워킹 행사 개최 등	금융혁신과
▶ 핀테크 기업 성장기반 조성	개선방안 마련 및 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금융데이터정책과
▶ 마이데이터 자기정보 관리·플랫폼 기능 강화	세부방안 마련 및 시행	금융혁신과
▶ 오픈뱅킹 기능 확대	개선방안 및 법개정안 마련	금융안전과
▶ 본인확인 방법 선진화	개선방안 및 규정개정안 마련	금융안전과
▶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마련	국제포럼 및 용역	글로벌금융과
▶ 아세안 협력 강화 및 해외진출 전략 고도화	역할 강화방안 마련	글로벌금융과
▶ 해외 금융협력협의회 역할·기능 강화	개선방안 마련	글로벌금융과
▶ 외국계 금융사 국내영업 애로 해소	지배구조법 하위법령 마련 및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검토	금융정책과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선진화		

9. (미래대응)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 첨단전략산업 금융지원	자금공급 집행	산업금융과
▶ 혁신성장펀드 추가조성	펀드 결성 및 집행	산업금융과
▶ 성장사다리펀드2 운영	펀드 결성·집행	산업금융과
▶ 기술금융제도 개편	테크평가 개편	산업금융과
▶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향 검토·마련	규율방향 마련	금융정책과
▶ 토큰증권·장외시장 제도 정비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과
▶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테스트 추진	금융정책과
▶ 가상자산 규율체계 확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금융혁신과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강화	특금법 시행령·고시 개정	FIU
▶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강화	집행	산업금융과
▶ ESG 공시제도 구체화	공시기준 초안 마련	공정시장과